

비정규직의 사회권 인식에 대한 연구*

이 주 희**

◀ 요약 ▶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어떻게 보호받는 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시민권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8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비정규직의 사회권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였던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세금 부담도 낮고 복지수준도 낮은 사회보다 세금수준과 복지수준이 모두 높은 사회를 선호하였다. 또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의 정부 책임과 지출 증가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고, 호혜성 원칙에 따른 높은 근로의식과 책무의식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복지수준의 사회를 선호한 소수 역시 존재하였는데, 이 집단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좀 더 많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더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높은 정치적 관심이나 주요 제도권 정당에 대한 높은 선호가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와 반비례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사회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권 보장 및 확장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반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사회권, 복지태도, 사회정치, 고진로

* 이 논문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기반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2010-330-B00133)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j.lee@ewha.ac.kr)

1. 서론 및 연구문제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단절과 그에 따른 안정적인 고용관계의 악화였다. 상시화된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사회양극화 문제를 부각시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방향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는 기존의 발전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모델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발전주의 혹은 생산주의적 복지체제(Holliday, 2000)로 분류되어 온 한국의 복지국가가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겪으며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규명작업(정무권, 2007a; 2008b)으로부터 기존의 발전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형 사회정책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유연안정성 모델 구축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다양한 결합 추구나 시장의 복지화 혹은 시장과 국가 간 균형을 중시하는 전망(전병유 외, 2007, 2009; 이철수, 2005, 이호근 2006)이 등장하게 된 것은 시장과 복지 어느 쪽도 놓을 수 없는 한국사회의 딜레마에 기인한다. 복지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과거 발전모델을 신자유주의시대에 회귀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추세에 맞서 보다 발전된 복지국가모델을 확립하려는 의도에 의해 절충된 모델이다. 물론 좀 더 광범위한 분배와 보편적 복지제도에 초점을 둔 입장(윤도현, 2003; 김영순, 2009; 이주희, 2009)과 시장의 역할과 효율성의 가치를 복지제공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투자국가론자(김연명, 2009; 양재진, 조아라 2009; 윤홍식 2009)의 입장이 대립하고는 있으나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의 재건을 중요시하는 최소복지주의 전망과 비교해서는 이 두 입장 모두 복지국가 발전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비정규직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는 사회보험 등 주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수혜율이 정규직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률 확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한동우, 2001; 김진구, 2002; 김종건·김연

명, 2003; 배화숙, 2005; 강효진, 2006; 성은미, 2007; 남우근, 2008; 김연명, 2001, 2010)에 집중되어 있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해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시사점을 얻고자 진행되었다(심창학, 2005; 2009).

이 연구는 기존에 진행되어 온 이 두 가지 방향에서의 연구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새로운 사회정책모델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한 한국적 특수성과 표준고용관계에서 이탈한 노동인구의 복지욕구 및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경제세계화와 서비스업의 확대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저임금 저부가가치 노동시장이 상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존 체제의 정비를 넘어 비정규직 자체의 방지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는 고용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은 고임금 고부가가치 일자리의 창출을 근간으로 하는 고진로(high road)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이주희, 2011). 이 연구는 이처럼 일자리 질의 제고에 중점을 둔 사회권 보장을 가능케 하는 기초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비정규직 스스로가 어떠한 사회권 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권이 보장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게 된 구체적인 기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고용형태와 괴리되어 공적 복지에서도, 또 기업차원에서의 차별로 인해 사적 복지로부터도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만큼 높은 사회권 의식을 가질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도 복지제고를 위한 자원을 사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층보다 국가의 소득보장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김수완, 2011).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지금까지 실시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분배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하층계급의 높은 비일관성 혹은 이중성이 복지의식에서 나타나고 있으며(김영순, 2011; 최균·류진석, 2000), 그 결과 계급변수는 이에 대한 주요한 결정요인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이성균, 2002).

지금까지의 복지의식 조사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복지국가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 소수자집단에 대한 복지필요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반

해, 이 연구는 비정규직이라는 핵심 복지수요대상에게 다양한 영역별 사회권 의식을 각 항목마다 독립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일자리 제공이나 고용안정성 확보, 적절한 임금수준의 보장, 직업훈련 등은 노동시장에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예방적 복지정책으로서 큰 중요성을 가지지만, 복지국가의 발전이 늦어 최소한도의 복지제도만 갖추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통상적 의미의 복지나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인지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의 도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이 이들 각각에 대해 정당하고 필요한 복지의 영역으로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비교를 위해 조사대상자에는 소수의 정규직과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 및 은퇴자 역시 포함되어 있다. 연구대상과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특성은 3장에 소개되어 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다음 장인 2장에서는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비정규직의 사회권 관련 실태를 다양한 영역에서 분석하고 있는 4장의 내용은 비정규직의 사회권 의식과 영향요인을 다루고 있는 5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실태가 이들의 사회권 의식에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6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후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비정규직의 사회권 의식 및 욕구(needs)와 사회정치(social politics)

산업화를 거친 모든 사회의 고민은 어떻게 시민권이 새롭게 등장한 노동자계급에게로 확장될 수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자유노동시장이 상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고, 경기침체나 개인적 사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를 제공해주는 복지정책의 확대와 함께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벤딕스(Bendix, 1984)는 이러한 사회권의 혜택에서 배제된 사람들, 특히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며 가장 나쁜 일자리에서 일하는 2류 프롤레타리아(“second proletariat”)에게

어떻게 보호받는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시민권을 줄 수 있는가가 산업화 이후의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리라 예측한 바 있다. 벤딕스의 예상은 경제세계화 이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정규직이 확산됨에 따라 보편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상당히 진전된 복지국가를 확립한 서구의 경우 이러한 문제의식은 바로 복지태도에 안전한 직장과 그 일자리에 연동된 여러 가지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노동시장의 내부자인 정규직과 외부자인 불안정 고용 비정규직간의 복지태도 차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1990년대 말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부자/외부자간 격차나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 쇠퇴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이 북유럽의 발전된 복지국가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Goul Andersen, 1999; Svallfors, 1999). 이보다는 오히려 계급, 그리고 일반인과 정치가나 사업가 등 엘리트 층 간의 격차가 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Svallfors, 2004; Blomberg and Kroll, 1999). 그러나 최근 실시된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내부자와 외부자가 복지국가의 사회 정책별로 뚜렷한 선호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하우스저만과 슈완더(Hausermann and Schwander, 2010)가 2008년 유럽사회조사(ESS 2008)를 실시한 13개국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는 사회보험과 소득격차를 인정하는 자유시장모델에 대해 외부자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이고 있었으며, 반면 외부자는 재분배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을 높여주는 사회투자정책을 내부자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개개인의 선호와 태도, 그리고 정치적 동원의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상정하는 결과이다.

발전국가 모델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쇠퇴한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도 2류 시민으로 여겨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발전된 서구 복지국가와 같이 다양하게 분화된 복지정책을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사회적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과 지출을 통한 사회적 권리의 상승을 지지하지 않는 집단의 존재 및 그 원인에 보다 집중한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의 낮은 복지국가 발전 수준이나 복지국가에 대한 미온적인 정치적 지지 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 작업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높은 사회권 선호와 호혜성 원칙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의무 수행이 서로 상충되는가 역시 조명될 필요가 있다. 고진로(high road) 경제를 목표로 하는 사회권은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추구하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호혜적 의무 역시 높은 수준의 복지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에서도 복지 제공은 호혜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Rothstein, 1998). 사회투자국가론 등 제 3의 길이 주창하는 복지 계약주의(Giddens 1998)가 비판받는 이유는 복지 지출을 생산적 영역에 한정하고 재분배에 대한 충분한 강조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¹⁾ 만일 비정규직의 사회권 의식에 이러한 호혜성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편주의적 복지사회의 확립을 위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복지의식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층계급의 복지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같은 공동체에 속한 빈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각종 사회조직 및 단체활동, 그리고 정치적 참여 등을 얼마나 중요한 시민의 자질로 비정규직이 평가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만일 높은 수준의 복지사회를 원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좋은 시민의 자질로 인정하기를 저어한다면 빈민 지원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고, 이는 곧바로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낮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원하면서 빈민에 대한 지원을 시민의 자질로 높게 평가한다면 이는 국가를 통하지 않은 개인적인 구빈 활동에 머무르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조직이나 단체에의 참여, 그리고 정치활동이 고진로(high road) 사회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시민의 자질로서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경제세계화 이후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 시민권과 관료적 복지국가를 의미하는 사회적 시민권 사이의 충돌이 점차 악화되어(Fraser and Gordon, 1994) 시민사회의 역량 확보를 통해 사회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참여에 기반한 사회권의 확대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권 제공이 점차 약화되

¹⁾ 이러한 이유로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할 권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들이 종종 많은 개인들에게는 일할 '의무'로만 여겨지게 되었다(Mundlak, 2007).

는 반면 규제 대상과 보호 대상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빠르고 유연한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Fudge, 2007).²⁾ 만일 비정규직이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원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참여의지를 결여하고 있다면 그러한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볼 변수는 연령, 성별, 학력, 경제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다. 연령, 특히 세대별 격차는 민주화를 최근에 겪은 한국사회에서 계급을 뛰어넘는 주요한 변수이다. 여성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식조사에서 일관되게 친 복지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지만(류진석, 2004) 한국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³⁾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내부에도 상당한 분화가 이루어져 대졸 등 고학력 비정규직이 존재하며, 또한 비록 본인 소득은 낮다 하더라도 소속된 가구의 총 소득은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비정규직 여부는 다른 어떤 변수보다 사회보험에의 배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그 내부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나은 편에 속하는 임시계약직과 여타 비정규직 고용형태간의 차이 역시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복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만족도도 함께 검토된다. 나쁜 건강상태는 현재 및 미래의 일자리를 통한 복리추구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원하게 만들 수 있다. 자녀를 통한 노후보장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현재의 일이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이 역시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을 희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근로의욕이나 사회보험 만족도는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명히 상정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근로의욕이 낮거나 높은 사유 자체가 무척 다양하고, 또 기존 사회보험에의 높은 만족도가 더 이상의 복지국가발전에 대한 욕구를 줄일 수도, 그러한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원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의 사회보장법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이신용, 2010)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사항에 대한 규율권한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고 의회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행정편의적 결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역할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유권자 확보를 위해서라도 각 정당들이 유권자에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

3) 한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남성보다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복지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조돈문, 2001).

이 연구는 이러한 기본적인 변수들에 대한 검토에 더해 비정규직의 사회권 의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다 광범위한 사회정치(social politics)적 맥락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평가, 특히 부의 공평한 분배나 삶의 기회평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에 대한 욕구가 상승할 수 있다. 정치적 관심이나 민주주의제도의 만족도가 비정규직의 사회권 의식에 미치는 영향 역시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내용이다. 정치적 관심이 높고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높은 사회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과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원이 부족하여 그 바람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선호가 정당을 통해 사회정책의 선택과정에 투영된다는 점(홍경준, 2009)을 고려할 때, 사회권에 대한 의식이 특정 정당 선호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

서구사회의 사회권 확장에 노동자 계급의 정치자원 동원, 즉 정치적 활동과 영향력이 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는 이미 잘 밝혀진 바 있다(Korpi, 1989; Esping-Andersen and Korpi, 1984; Korpi, 1978; Shalev, 1983). 물론 한국의 비정규직이 처한 노동환경 상황이나 조직력이 서구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경험했던 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사회권 제공 능력과 방식 역시 정책대상자로서의 시민사회가 각 복지 영역별 공정한 분배와 삶의 기회수준의 적절함에 대해 어떤 사회의식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결사체 활동에의 선호와 공동체의식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력이나 정치적 역량의 중요성은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밀려 가장 큰 복지의 후퇴를 경험했던 국가에서 바로 그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더욱 더 중요하게 평가되기도 한다(Gentile and Tarrow, 2009). 따라서 비정규직의 미래의 생활수준에 대한 판단, 삶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 한국사회의 갈등정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정치제도 및 참여도에 대한 만족도와 활동역량 등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도 큰 의의를 지닐 뿐 아니라, 미래의 도달 가능한 사회권 수준에 대해 예측하는 독립변수로서도 기여할 수 있다.

3. 자료 및 연구 방법

1) 자료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 심층면접대상자의 인구 및 고용관련 주요 특성 (총 80명)

| 대상자 특성 | N(%) | 대상자 특성 | N(%) |
|----------|----------|----------|----------|
| 인구학적 특성 | | 고용관련 특성 | |
| 성별 | | 직업 | |
| 남성 | 25(31.3) | 일반생산직 | 9(11.3) |
| 여성 | 55(68.8) | 기술직 | 5(6.3) |
| 연령 | | 사무직 | 15(18.8) |
| 20대 | 20(25) | 영업 및 판매직 | 17(21.3) |
| 30대 | 21(26.3) | 관리직 | 2(2.5) |
| 40대 | 19(23.8) | 전문직 | 13(16.3) |
| 50대 | 14(17.5) | 실업 | 1(1.3) |
| 60대 이상 | 6(7.5) | 명예퇴직 | 1(1.3) |
| 학력 | | 자영업 | 2(2.5) |
| 중졸이하 | 7(8.8) | 단순노무직 | 13(16.3) |
| 고졸이하 | 22(27.5) | 기타 | 2(2.5) |
| 대졸이하 | 40(50.0) | 산업 | |
| 대학원 졸 이상 | 10(12.5) | 제조 | 12(15.4) |
| 기타 | 1(1.3) | 서비스 | 65(83.3) |
| 가구주여부 | | 기타 | 1(1.3) |
| 가구주 | 31(39.2) | 고용형태 | |
| 가구주 아님 | 48(60.8) | 정규직 | 8(10) |
| 혼인상태 | | 간접고용 | 12(15) |
| 미혼 | 38(47.5) | 임시계약 | 38(47.5) |
| 결혼 | 39(48.8) | 일용직 | 8(10) |
| 이혼 | 2(2.5) | 특수고용 | 8(10) |
| 사별 | 1(1.3) | 자영업 | 2(2.5) |
| | | 실업 및 은퇴 | 2(2.5) |
| | | 기타 | 2(2.5) |
| | | 근로시간형태 | |
| | | 전일제 | 58(74.4) |
| | | 시간제 | 8(10.3) |
| | | 기타 | 12(15.4) |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응답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주의 깊게 이루어졌다. 특히 비정규직은 그 범주내의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권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간접고용, 임시계약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의 대상자들을 포함시켰고, 비정규직에 비해 안정적인 고용상태라고 인식되지만 여전히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인구로 볼 수 있는 정규직과 자영업자, 실업자, 은퇴자에 대해서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대상자들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 및 경기, 부산광역시와 경남 지역의 20대에서 6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에 여성의 비중이 훨씬 더 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이 남성보다 과대 표집 되었다. 자세한 심층면접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위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의 사례별 정보는 [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적 분석이 가능한 항목의 응답은 모두 DB화하여, 그리고 응답자의 의견이 문장으로 제시된 심층면접내용은 항목별, 사례별로 모두 개별 녹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비록 대상자 선정이 인구사회학적, 고용형태별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졌고 통계처리를 통해 상당히 많은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완전히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해석 시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 2명에 불과한 자영업자, 실업 및 은퇴자 등은 통계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신 비교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분석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자료의 특성을 살려 실태파악을 위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t-검정과 분산분석(ANOVA), χ^2 검증을 실시한 후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표에 적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설명한 표집방식의 제한점을 감안하여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 이러한 유의미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고, 가능한 한 응답자의 심층면접 녹취자료를 활용하여 양적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 수가 한정되어 있어 이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내 사회권 의식의 차이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기 어려웠다. 대신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도 모두 같은 수준의 사회권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일단 응답자를 두 집단, 즉 높은 수준의 사회권을 원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인구 및 사회학적 특성, 고용형태, 복지 관련 상황 및 만족도, 한국사회 및 정치에 대한 평가 등 주요한 사회권 실태와 관련된 응답내용을 비교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미래에 선호하는 복지사회의 선택처럼 명백하게 집단이 구분되지 못하는 경우, 즉 정부의 책임 범위나 좋은 시민의 자질과 관련된 질문과 같이 연속변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 점수대 값 이상의 답을 한 집단과 평균 점수대 값 미만의 답을 한 집단으로 나누어 마찬가지로 이들 간 다양한 관련 변수에 대한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았다.⁴⁾ 항목에 따라 평균점수대 값 미만의 응답을 한 비정규직은 약 20~40%로 파악되었다.

4. 비정규직의 사회권 관련요인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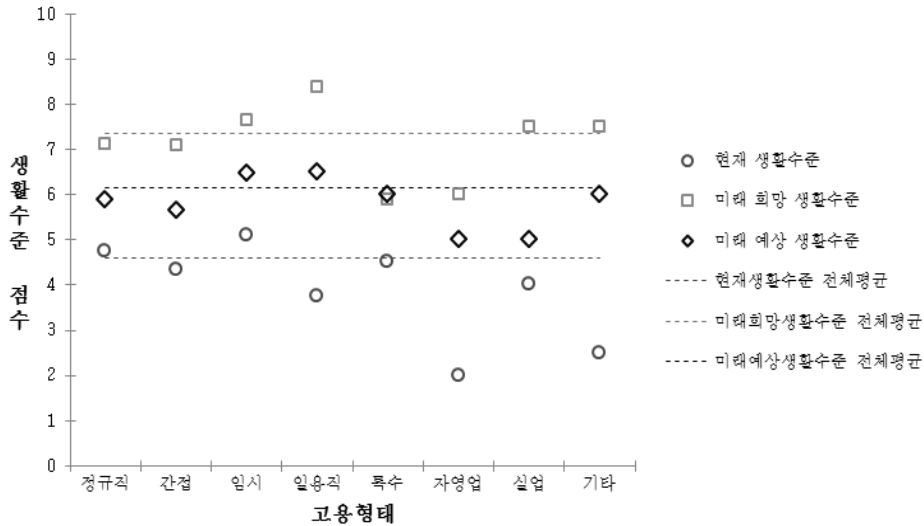
1) 현재-미래희망-미래예상 생활수준 비교

비정규직의 생활수준 평가를 위해 현재 생활수준과 약 10년 후 미래의 희망 생활수준, 그리고 미래에 실제 예상되는 생활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이 최하(1점)에서 최상(10점)까지 평가한 값의 평균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본 결과가 [그림 1]에 요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의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임시계약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조사에 포함된 소수 자영업자의 낮은 평가(2.0)가 두드러진다. 임시계약직의 현재 생활수준 평가(5.11)가 정규직(4.75)보다도 높은 이유는 조사대상자인 정규직이 소규모 불안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이기 때문이라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정규직의 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은 비정규직보다 월등하게 높지 않아 정규직의 생활수준이나 기댓값이 비정규직보다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⁴⁾ 이러한 구분은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엄밀한 방법론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 연구 자체가 비정규직의 사회권의식에 대한 첫 탐색적 연구로 통계적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상태인 만큼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이후 결과들이 해석되어야 함을 미리 밝힌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미래의 희망 생활수준은 현재의 생활수준보다 평균 2.77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래의 예상 생활수준은 희망 생활수준보다 1.2점 더 떨어져 예상 수준이 희망수준보다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생활수준(최상 10점-최하 1점)에 대한 현재-미래 비교



2) 복지관련 실태 및 만족도

비정규직의 복지 관련 실태 및 만족도는 건강과 스트레스 수준, 근로의욕 및 노후 자녀 의존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만족도와 복리우선순위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건강과 스트레스는 비정규직의 복지 관련 실태 중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건강은 좋거나(37.8%) 보통이라는 응답(51.4%)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임시계약직과 일용직 중 나쁜 편이라는 응답 비중이 여타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스트레스 수준도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다른 집단에 비해 임시계약직과 일용직이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높은 편이었다.

[표 2] 고용형태별 복지관련 관련 실태 및 만족도

(단위: %, 명)

| | | 전 체 | 정규직 | 임시 계약 | 간접 고용 | 특수 고용 | 일용직 |
|--------------------------|-----------------------------------|----------|----------|----------|----------|----------|---------|
| 건강과 스트레스 수준 ¹ | | | | | | | |
| 건강수준 | 좋음 | 37.8(28) | 50.0(4) | 34.2(13) | 41.7 (5) | 37.5(3) | 37.5(3) |
| | 보통 | 51.4(38) | 50.0(4) | 47.4(18) | 58.3 (7) | 62.5(5) | 50.0(4) |
| | 나쁨 | 10.8(8) | 0.0(0) | 18.4 (7) | 0.0 (0) | 0.0(0) | 12.5(1) |
| 스트레스수준 | 많음 | 50.0(37) | 25.0(2) | 60.5(23) | 33.3 (4) | 37.5(3) | 62.5(5) |
| | 적음 | 50.0(37) | 75.0(6) | 39.5(15) | 66.7 (8) | 62.5(5) | 37.5(3) |
| 근로의욕 및 노후보장 ¹ | | | | | | | |
| 근로의욕 | 높음 | 57.1(26) | 28.6(2) | 65.7(23) | 66.7(4) | 62.5(5) | 28.6(2) |
| | 낮음 | 42.9(27) | 71.4(5) | 34.3(12) | 33.3(2) | 37.5(3) | 71.4(5) |
| 노후자녀의존 가능성 | 긍정 | 13.6(8) | 0.0(0) | 10.3(3) | 22.2(2) | 0.0(0) | 37.5(3) |
| | 부정 | 86.4(51) | 100.0(6) | 89.7(26) | 77.8(7) | 100.0(7) | 62.5(5) |
| 만족도 및 복리 우선순위 | | | | | | | |
| 만족도 ² | 일 | 6.1 | 5.5 | 6.1 | 6.2 | 5.1 | 7.5 |
| | 생활전반 | 6.2 | 6.4 | 6.5 | 5.8 | 5.6 | 6.3 |
| 사회보험 만족도 ² | 고용보험* | 5.8 | 5.8 | 5.4 | 7.9 | 5.3 | 5.7 |
| | 건강보험 | 6.2 | 5.9 | 6.1 | 7.0 | 5.5 | 6.6 |
| 국민연금 | 국민연금 | 5.1 | 5.4 | 4.7 | 6.5 | 5.4 | 4.5 |
| | 복지제고요인 상대적 중요도 평가 ³ | 일자리 | 8.2 | 8.1 | 7.9 | 8.8 | 7.9 |
| 정규직* | | 7.1 | 6.0 | 6.9 | 8.2 | 5.8 | 8.6 |
| 직업훈련 | 직업훈련 | 6.8 | 6.0 | 6.8 | 7.6 | 6.3 | 6.6 |
| | 높은 학력 | 6.0 | 5.9 | 5.9 | 6.9 | 4.6 | 6.8 |
| 단체활동 | 단체활동 | 5.4 | 4.9 | 5.5 | 5.3 | 4.9 | 5.6 |
| | 정치활동 | 3.4 | 2.4 | 3.4 | 3.7 | 3.3 | 3.8 |

주 1: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과 스트레스 수준, 근로의욕 및 노후보장에 대한 χ^2 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주 2: 0점 전혀 만족하지 못함~10점 완벽하게 만족

주 3: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10점 가장 중요함

*p<.05; **p<.01; ***p<.001

근로의욕은 ‘만일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에 기초하여 측정되었다. 응답자의 전체 평균인 57.1%에 비해 낮은 근로의욕을 보인 두 집단은 정규직과 일용직이었다. 심층면접내용을 통해 살펴 본 부정적 응답의 사유는 상당히 다양하였다. 취미나 공부(사례 16, 62, 63, 65), 혹은 봉사활동(사례 1, 7,

12, 69) 외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과중한 업무에서의 탈피나 가사와의 양립 어려움(사례 32, 33, 47, 49, 55, 57, 61)이었다. 특히 사례 61은 보다 구체적으로 ‘양육비가 급여보다 더 많이 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만일 일의 강도나 경쟁으로 인한 피로도가 낮추어질 수 있고 적절한 일과 가정의 양립책이 시행된다면 근로의욕이 더 많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후에 자녀에 의존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비정규직의 미래의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이 질문에는 응답자 중 단 8%만이 긍정하였으며, 비정규직 내 편차도 다른 변수들에 비해 차이가 크지 않았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 사유로 ‘자녀세대의 소득수준이 올라가도 그에 수반한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노부모까지 돌보진 못할 것’이라는 사례 40의 설명과 유사한 응답을 하였다.

일이나 생활 전반과 관련된 만족도의 격차 역시 크지 않았지만, 일용직의 일 만족도가 가장 높고(7.5), 정규직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5.5)은 고용형태가 만족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지표가 아님을 알려준다. 사회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6점대를 기록한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들은 5점대의 평균점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고용형태별로 큰 편차를 보여, 간접고용직은 여타 고용형태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준 반면 현재 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자영업자의 점수는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심층면접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해당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5점대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에 대한 응답자들의 불만내용은 주로 해고되어야만 받을 수 있고(사례 5) 실업급여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는 혜택을 보는 것이 별로 없으며(사례 12), 한정된 기간만 주기 때문에(사례 13) 생활유지에 힘들 정도로 받는 금액이 적다(사례 7, 49)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재취업을 도와주는 측면이 부족하고 취업알선도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사례 30), 그리고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 예산을 더 써야(사례 57)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임시계약직이어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더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본 적도 없고 뭐 하는 보험인지도 모르겠다’(사례 47)는 응답자도 발견되었다.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응답자들의 불만사항은 결코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은 비싸고 혜택이 없다(사례 3, 7)는 의견부터 나쁜진 않지만 건강

보험료 부담이 더 적어졌으면(사례 37) 하는 바람,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적게 내고 시민만 다 걷어가고 너무 비싸서 기준 없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나쁘다(사례 8)는 구체적인 지적까지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건강보험에서 커버되는 병이 너무 적어 비싼 병원비를 내야 하기 때문(사례 36)에, 또 잔병치레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암이 걸렸거나 큰 수술의 위기에는 도움이 안 된다(사례 44)는 응답자도 있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은 적자를 내는 등 운영에 의문이 많아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사례 12, 13, 15, 20, 29, 37, 41, 61, 53), 주위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사례 16, 45, 47)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뭔가 계속 손해 보는 느낌(사례 17), 크게 신뢰할 수 없다(사례 33), 도움도 안 되는데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으니(사례 62), 차라리 국민연금 내는 돈을 사 보험기관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사례 40) 이라는 의견도 많았으며,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에 대해 사례 46은 국가가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균적인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기 위해, 즉 개인의 복지제고를 위해 각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가 [표 2]의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중요성(8.4)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정치활동에 대해 가장 낮게(3.4)하고 평가하고 있었다. 정규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용직과 간접고용직들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수고용 형태와 정규직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정규직이 되는 것이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사례 2, 9, 12, 13, 15, 31 외 다수)’라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내 세부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심층면접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례 34는 높은 학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그 원인에 대해 ‘... 소외되지 않으려면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내가 고졸이라 학력이 낮아 아는 것이 없으니 단절이 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다.

3) 한국사회 및 정치에 대한 평가

비정규직의 사회권 실태는 이들의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평가 및 정치만족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부의 공정한 분배나 삶의 기회평등, 그리고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부의 공정한 분배의 평균점수는 전혀 실현되고 있지 못한 1점부터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4점 중 1점에 훨씬 더 가까운 1.6점에 불과하였다. 반면 한국사회의 사용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진보와 보수 간 갈등정도는 갈등이 없다는 1점부터 매우 심하다는 4점 사이에서 평균 3점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간접고용직이 다른 집단보다 좀 더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3] 고용형태별 한국사회 및 정치에 대한 평가와 선호도

(단위: %, 명)

| | | 전체 | 정규직 | 임시 계약 | 간접 고용 | 특수 고용 | 일용직 |
|------------------------------|-------------|----------|---------|----------|----------|----------|---------|
|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 | | | | | | | |
| 한국사회 현실평가 ¹ | 부의 공정한 분배 | 1.6 | 1.4 | 1.7 | 1.8 | 1.8 | 1.3 |
| | 삶의 기회평등 | 2.2 | 2.0 | 2.3 | 2.3 | 2.5 | 2.0 |
| |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 | 2.3 | 2.3 | 2.2 | 2.4 | 2.4 | 2.3 |
| 한국사회 갈등정도 평가 ² | 사용자와 노동자 | 2.9 | 2.9 | 3.0 | 2.7 | 3.1 | 2.9 |
| | 정규직과 비정규직 | 3.0 | 3.0 | 3.0 | 3.1 | 3.1 | 3.0 |
| | 부자와 빈자 | 3.3 | 3.4 | 3.2 | 3.3 | 3.5 | 3.4 |
| | 진보와 보수 | 3.1 | 3.0 | 3.3 | 2.8 | 3.1 | 2.9 |
| 정치만족도와 정당선호도 | | | | | | | |
| 정치적 관심 및 만족도 ³ | 정치적 관심정도 | 2.5 | 2.1 | 2.4 | 2.4 | 2.8 | 2.9 |
| | 정치참여기회 만족도 | 4.6 | 5.1 | 4.6 | 4.6 | 4.0 | 4.9 |
| | 민주주의제도 만족도 | 5.7 | 5.8 | 5.5 | 6.3 | 6.3 | 5.1 |
| 정당선호도 | 한나라당 | 11.6(8) | 12.5(1) | 11.8(4) | 18.2(2) | 12.5(1) | 0.0(0) |
| | 민주당 | 23.2(16) | 12.5(1) | 14.7(5) | 36.4(4) | 25.0(2) | 50.0(4) |
| | 국민참여당 | 1.4(1) | 0.0(0) | 2.9(1) | 0.0(0) | 0.0(0) | 0.0(0) |
| | 진보신당 | 1.4(1) | 0.0(0) | 2.9(1) | 0.0(0) | 0.0(0) | 0.0(0) |
| | 민주노동당 | 4.3(3) | 12.5(1) | 5.9(2) | 0.0(0) | 0.0(0) | 0.0(0) |
| | 자유선진당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 선호정당 없음 | 58.0(40) | 62.5(5) | 61.8(21) | 45.5(5) | 62.5(5) | 50.0(4) |

주 1: 1점 전혀 실현되지 않음~4점 완벽하게 실현, 분산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주 2: 1점 갈등 없음~4점 매우 심함, 분산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주 3: 정치적 관심정도: 1점 관심 없음~5점 매우 관심,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정치참여기회 및 민주주의 제도 만족도: 0점 전혀 만족하지 못함~10점 완벽하게 만족, χ^2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정치적 관심이나 만족도도 간접고용직과 특수고용직이 민주주의제도의 만족도에 서 조금 높은 점수를 기록했을 뿐, 거의 모든 조사대상자에게서 고르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치적 관심도 역시 1점부터 5점 척도에서 평균 2.5점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시민권의 발전이 해당 시민집단의 정치적 관심과 역량에 크게 영향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정치적 관심도가 낮은 사유와 관련된 심층면접 내용을 살펴보면 ‘알면 알수록 배신감이 느껴져서(사례 2)’ ‘정치가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권력 싸움을 하니(사례 8), ‘아무리 진보가 나오고 뭐라도 해도 어차피 하게 되면 똑 같다(사례 12), ‘내가 관심 가져도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기대감이 없어서(사례 29, 32), ‘내 삶에 크게 영향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사례 64), ‘먹고살기 힘들어 다른 것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사례 70)’ 등 냉소적인 언급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정당선호도도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진보정당보다는 민주당(23.2%)과 한나라당(11.6%)이 많았고, 대부분(58%)은 선호정당이 없었다.

5. 비정규직의 사회권 의식 및 영향요인

1) 사회권 관련 미래의 목표 사회: 선호하는 복지사회 유형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세금부담과 관련된다. 보통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원하지만, 이러한 복지국가의 확립이 높은 조세부담과 연결된다면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인 만큼, 소수의 자영업자와 실업 및 은퇴자를 제외한 분석대상 전체의 약 86%(총 58명)가 세금부담이 적고 복지수준이 낮은 사회보다는 세금부담이 높더라도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를 미래에 갖고 싶다는 응답을 하였다(표 4 참조).

고용형태별로는 일용직의 지지 수준이 75%로 가장 낮았다. 세금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높은 복지수준을 원한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만일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높은 복지수준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응답(사례 33), ‘젊었을 때 세금을 더 내더라도 늙었을 때 복지가 좋은 것이 낫다’는 의견(사례 18),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마련하려면 세금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사례 63, 74),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어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정의’이며(사례 74),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사례 19)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세금부담이 낮고 복지수준이 낮은 사회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경우 이미 너무 세금이 높아 더 이상의 부담이 힘들며,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당장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사례 24), ‘지금도 세금 부담이 많은데 여기서 더 늘어난다면 소득이 더 줄어 싫다’(사례 34, 47), ‘사회구성원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답이다’(사례 31), ‘복지는 자신이 해결해야지 빈곤은 나라에서도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은 최대한 적게 내야 한다’(사례 48). 물론 대다수의 비정규직이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과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비정규직 역시 약 15%(총 10명)로, 이들이 불안정한 직업과 낮은 경제력을 가진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무시할 만한 비중은 아니었다. [표 4]는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진 비정규직이 낮은 수준의 복지사회를 선택했는가를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연령과 학력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고령인 응답자(48세)가 그렇지 않는 응답자(38.2세)보다, 그리고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낮은 수준의 복지사회를 선택하였다. 혼인상태 변수의 영향력은 연령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외환위기 이후 가구상황이 상대적으로 호전된 경우가 악화된 경우보다 약간 더 낮은 수준의 복지사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낮은 복지국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월평균소득과 가구소득, 그리고 부채 총액 모두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적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세부 집단별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직장구

모가 31~100명 사이의 큰 경우보다 6~30명 사이에 적은 규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 선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입증되었다. 즉,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고령이고 저학력이며 소득이 낮고 적은 규모의 기업에서 일할수록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강한 영향력에 비해 건강과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근로의욕이나 노후보장상태는 응답 격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의욕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낮은 수준의 복지사회를 택하는 경우가 미약하게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 유일한 예외이다. 반면,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선택한 응답자의 일 만족도는 7.2로 5.8을 기록한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 선택 집단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관련된 만족도도 유사하게 높았다. 이들은 또한 정규직, 직업훈련, 높은 학력이 본인의 복리 제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드러내었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사회갈등정도는 낮게 평가하였다. 정치 참여기회나 민주주의제도의 만족도도 높았고, 선호정당별로 살펴보았을 때 한나라당 지지자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많았다. 민주당 지지자의 비중도 선호정당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표 4] 높은 복지수준 대 낮은 복지수준 선호 집단간 비교

(단위: %, 명)

| | | 세금부담 높고 복지수준 높은 사회 (85.3%: 58명) | 세금부담 낮고 복지수준 낮은 사회 (14.7%: 10명) |
|------------------|---------|---------------------------------------|---------------------------------------|
| 인구사회학적 특성 | | | |
| 연령* | | 38.2 | 48.0 |
| 성별 | 남자 | 88.2(15) | 11.8(2) |
| | 여자 | 84.3(43) | 15.7(8) |
| 학력** | 중졸이하 | 42.9(3) | 57.1(4) |
| | 고졸이하 | 83.3(15) | 16.7(3) |
| | 대졸이하 | 91.2(31) | 8.8(3) |
| | 대학원졸 이상 | 100.0(9) | 0.0(0) |
| 혼인상태* | 미혼 | 93.8(30) | 6.3(2) |
| | 결혼 | 79.4(27) | 20.6(7) |
| | 이혼 및 사별 | 50.0(1) | 50.0(1) |

| | | 세금부담 높고 복지수준 높은 사회 (85.3%: 58명) | 세금부담 낮고 복지수준 낮은 사회 (14.7%: 10명) |
|-------------------------|---------------|---------------------------------------|---------------------------------------|
| 외환위기 이후 가구 경제수준변화 | 호전 | 75.0(15) | 25.0(5) |
| | 악화 및 동일 | 88.6(39) | 11.4(5) |
| 가구 소득 및 부채 (만원) | 월평균소득 | 177.2 | 143.0 |
| | 월평균가구소득 | 457.5 | 342.0 |
| | 부채총액 | 1763.0 | 142.0 |
| 주관적 생활수준평가 | 현재 | 4.6 | 5.1 |
| | 미래희망 | 7.3 | 7.5 |
| | 미래예상 | 6.2 | 6.1 |
| 고용형태 | | | |
| 정규직 및 비정규직 유형 | 정규직 | 85.7(6) | 14.3(1) |
| | 임시계약직 | 85.3(29) | 14.7(5) |
| | 간접고용직 | 81.8(9) | 18.2(2) |
| | 특수고용직 | 100.0(8) | 0.0(0) |
| | 일용직 | 75.0(6) | 25.0(2) |
| 직장규모 ^{1*} | | 3.3 | 2.2 |
| 건강과 스트레스 수준 | | | |
| 건강수준 | 좋음 | 92.9(26) | 7.1(2) |
| | 보통 | 75.0(24) | 25.0(8) |
| | 나쁨 | 100.0(8) | 0.0(0) |
| 스트레스수준 | 많음 | 88.9(32) | 11.1(4) |
| | 적음 | 81.3(26) | 18.8(6) |
| 근로의욕 및 노후보장 | | | |
| 근로의욕 | 높음 | 91.2(31) | 8.8(3) |
| | 낮음 | 77.8(21) | 22.2(6) |
| 노후자녀의존 가능성 | 긍정 | 85.7(6) | 14.3(1) |
| | 부정 | 85.7(42) | 14.3(7) |
| 만족도 및 복리 우선순위 | | | |
| 만족도 ² | 일 | 5.8 | 7.2 |
| | 생활전반 | 6.3 | 5.9 |
| 사회보험 만족도 ² | 고용보험 | 5.6 | 7.3 |
| | 건강보험 | 6.2 | 6.1 |
| | 국민연금 | 5.1 | 5.0 |
| | 복지제도요인 | 8.1 | 8.9 |
| | 일자리 | 8.1 | 8.9 |
| 상대적 중요도 평가 ³ | 정규직* | 6.9 | 8.7 |
| | 직업훈련* | 6.5 | 8.0 |
| | 높은 학력* | 5.6 | 7.9 |
| | 단체활동 | 5.4 | 5.1 |
| | 정치활동 | 3.1 | 4.1 |
| |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 | | |
| 한국사회 현실평가 ⁴ | 부의 공정한 분배 | 1.6 | 1.4 |
| | 삶의 기회평등 | 2.3 | 2.2 |
| |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 | 2.2 | 2.7 |

| | | 세금부담 높고 복지수준 높은 사회 (85.3%: 58명) | 세금부담 낮고 복지수준 낮은 사회 (14.7%: 10명) |
|------------------------------|-------------|---------------------------------------|---------------------------------------|
| 한국사회 갈등정도 평가 ⁵ | 사용자와 노동자 | 3.0 | 2.6 |
| | 정규직과 비정규직* | 3.1 | 2.6 |
| | 부자와 빈자* | 3.4 | 2.9 |
| | 진보와 보수*** | 3.2 | 2.3 |
| 정치만족도와 정당선호도 | | | |
| 정치적 관심 및 만족도 ⁶ | 정치적 관심정도 | 2.4 | 3.1 |
| | 정치참여기회 만족도* | 4.4 | 6.8 |
| | 민주주의제도 만족도 | 5.5 | 6.3 |
| 정당선호도 | 한나라당 | 57.1(4) | 42.9(3) |
| | 민주당 | 75.0(12) | 25.0(4) |
| | 국민참여당 | 100.0(1) | 0.0(0) |
| | 진보신당 | 100.0(1) | 0.0(0) |
| | 민주노동당 | 100.0(3) | 0.0(0) |
| | 자유선진당 | 0.0(0) | 0.0(0) |
| | 선호정당 없음 | 94.6(35) | 5.4(2) |

주 1: (1) 1~5명 (2) 6~30명 (3) 31~100명 (4) 101~300명 (5) 301~500명 (6) 501~1000명 (7) 1000명 이상

주 2: 0점 전혀 만족하지 못함~10점 완벽하게 만족

주 3: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10점 가장 중요함

주 4: 1점 전혀 실현되지 않음~4점 완벽하게 실현

주 5: 1점 갈등없음~4점 매우 심함

주 6: 정치적 관심도: 1점 관심없음~5점 매우 관심

정치참여기회 및 민주주의 제도 만족도: 0점 전혀 만족하지 못함~10점 완벽하게 만족

*p<.05; **p<.01; ***p<.001

2) 사회권 영역별 정부의 책임범위 및 시민의 책무

이 절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복지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대상자가 정부 책임의 정도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비록 높은 수준의 복지사회를 원한다 해도 특정 사안별로 사회권 보장과 관련된 정부 역할의 비중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복지 영역별 정부 책임의 정도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0점)부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인 경우(10점)까지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결과를 아래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항목별 평균점수는 약 7점 전후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각

고용형태에 따라 정부 책임의 정도에 대해 상당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정부 책임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질병이 있는 자에게 적절한 의료보장(8.1점)을 해야 한다는 항목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6.6점)이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맞벌이 부부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부 책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간접고용은 적절한 임금 수준 보장, 임시계약직은 질병 있는 자에게 적절한 의료보장, 일용직은 고령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특수고용은 고용안정성 확보와 의료보장에서의 정부 책임 점수가 높았다.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의 경우 간접 고용직에서 정부 책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고용안정성 확보에서는 비정규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정규직에서 오히려 가장 높았다.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은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까지의 교육기회 제공은 일용직에서 정부 책임 점수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현재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 고용형태 중 직업훈련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걸쳐 평균보다 낮은 응답을 한 집단은 자영업자였다.

특히 이 질문은 개방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들에게 그렇게 평가한 이유와 또 그러한 정부의 책임과 복지제공에 수반하는 시민으로서의 책무까지 문의하였다.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 복지수요와 관련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책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다수 응답자들이 긍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례 47은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이 10점(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이라 했지만, 그에 상응하여 ‘시민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실제로 이 문항의 경우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열심히, 눈높이를 낮추어서라도 또 능력을 개발해서라도 최선을 다 하여 일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정부가 적절한 임금 수준은 보장해야 하겠지만 시민 역시 ‘자신의 실력을 기르고, 내 임금이 적절하지 않을 때 적절하도록 투쟁해야’(사례 25)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업훈련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이 없어야’(사례 17)하며,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야 한다(사례 22)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 43은 기회 보장을 위해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국가의 책임이 크지만 ‘자신의 적성을 미리 미리 파악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민의 의무를 지적하고 있다.

[표 5] 고용형태별 복지 영역별 정부 책임의 중요도 평가

| | 전체 | 정규직 | 임시 계약 | 간접 고용 | 특수 고용 | 일용직 |
|---------------------|------|------|----------|----------|----------|------|
|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 7.28 | 7.38 | 7.34 | 7.58 | 7.25 | 6.50 |
| 고용안정성 확보 | 7.70 | 8.43 | 7.50 | 7.92 | 8.13 | 7.25 |
| 적정한 임금수준의 보장 | 7.81 | 8.13 | 7.71 | 8.25 | 7.63 | 7.50 |
| 직업훈련 제공 및 기간 내 임금보전 | 7.12 | 6.75 | 7.34 | 7.33 | 7.00 | 6.25 |
| 질병 있는 자에게 적절한 의료보장 | 8.12 | 7.75 | 8.42 | 7.92 | 8.13 | 7.38 |
| 고령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 7.78 | 7.75 | 7.87 | 7.67 | 7.38 | 8.00 |
|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 6.64 | 6.13 | 7.03 | 7.00 | 5.88 | 5.50 |
| 맞벌이부부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 | 7.84 | 8.50 | 8.05 | 7.67 | 7.25 | 7.00 |
| 교육기회 제공(대학교육까지) | 7.01 | 7.00 | 7.16 | 6.67 | 6.63 | 7.25 |
| 적절한 가격의 주택 제공 | 7.78 | 7.88 | 7.92 | 7.50 | 7.75 | 7.50 |
| 사례수 | 74 | 8 | 38 | 12 | 8 | 8 |

주: 0점 전혀 책임 없음 ~ 10점 전적으로 정부 책임

고용형태에 따른 복지 영역별 정부 책임의 중요도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이러한 각 복지 영역별로 정부 책임범위에 대해 평균점수대 값보다 낮은 평가를 한 분석대상자의 특성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는 각 복지영역마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 [표 4]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한 후 평균 미만집단의 특성만을 요약한 것으로, 여기에 사용된 ‘높은’ 혹은 ‘낮은’이라는 수식어는 모두 다 평균 이상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체로 의료보장과 대학교육 기회제공 이 두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정부의 책임범위를 평균보다 낮게 평가한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영역에서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가 평균미만집단에 더 많이 속해 있었는데, 저학력자가 정부 정책의 보호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이다. 노후보장과 관련하여서는 노후에 자녀에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미만 집단에 더 많이 속해있었다.

고용형태 및 근로의욕 여부는 각 복지영역마다 달라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특히 고용형태와 관련해서는 정규직이 낮게 평가하는 정부책임 복지영역

과 더 형편이 어려운 비정규직 형태가 낮게 평가하는 정부책임 복지영역이 뚜렷히 구분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을 제외한 일자리 관련 복지영역, 그리고 의료보장과 고령자 및 실업자 생활수준 보장에 있어 정규직은 평균보다 낮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직업훈련이나 보육서비스, 대학교육기회제공, 그리고 주택 제공 등의 복지영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범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대략 높은 일 만족도를 가지고 높은 학력을 중시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사회의 사회보장제도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 역시 정부책임을 낮게 평가한 집단에 속해 있었다. 직업훈련과 대학교육에의 기회보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복지영역에서 평균미만 평가집단은 높은 민주주의제도 및 정치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선호정당이 없는 경우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앞의 [표 4]와도 유사한 결과로, 높은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정당에 소속된 경우 오히려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의 정부책임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은 제도권 정치 내에서의 복지국가에 대한 낮은 지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복지영역 중 일자리제공, 고용안정성 확보, 적절한 임금수준의 보장, 그리고 직업훈련 및 그 기간 동안의 임금보전, 대학교육기회 제공 등은 모두 고진로(high road) 경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인 중의 하나인 일자리의 질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다. 나머지 영역과는 달리 직업훈련에 대해 평균보다 낮은 정부책임을 부과한 집단의 경우 낮은 근로의욕을 가지고 자신의 복리를 위한 일자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외환위기 이후 가정경제가 악화되어 소득은 낮았지만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다. 고용형태별로도 비정규직 중 가장 일자리의 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간접고용과 일용직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는데, 이는 이러한 집단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작업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대학까지의 교육제공 영역 역시 여타 복지영역과는 달리 고령자, 여성, 저학력자, 간접고용직과 특수고용직이 오히려 더 많이 평균미만집단에 분포하고 있었고, 이들도 낮은 일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낮은 민주주의제도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복지영역별 정부책임범위 평균 미만집단 특성

| | 인구사회학적 특성 | 고용형태 | 건강과 스트레스 | 근로의욕 노후보장 | 만족도와 복리순위 | 한국사회 평가 | 정치만족도 정당선호도 |
|--------------|------------------------|--------------------|-----------------|------------|---------------------------------|----------------|----------------------------------|
| 일자리 제공 | 남성 | 정규/특고/일용 | - | 높은의욕 노후의존 | - | 높은 사회보장 제도평가* | 한나라당 민주당 |
| 고용 안정성 확보 | 남성 경제호전 | 정규/일용/간접고용 적은 직장규모 | - | 노후의존 | 높은 일만족도* 직업훈련*/높은학력 중시** | 높은 사회보장 제도평가* | 높은 민주주의 제도만족도* 한나라당 |
| 임금 수준 보장 | 남성 경제호전 | 정규/특고/일용 적은 직장규모** | - | 높은의욕 노후의존 | 높은 일만족도 | - | 높은 민주주의 제도만족도 한나라당 |
| 직업 훈련 | 남성 저학력 경제악화* 저소득/많은 부채 | 간접고용/일용 | 나쁜건강/많은 스트레스 | 낮은의욕 노후의존 | 일자리 중요성 낮게 평가* | - | 낮은 정치적 관심*/민주주의 제도만족도 선호정당 없음 |
| 의료 보장 | 여성 저학력 경제호전 | 정규/일용 적은 직장규모** | 좋은 건강 | 높은의욕 노후의존 | 낮은 일/생활만족도 높은 사회보험 만족도 높은학력중시** | 높은 사회보장 제도평가* | 높은 민주주의 제도만족도한 나라당 |
| 고령자 생활 수준 보장 | 남성 저학력 | 정규/간접고용 | 보통 건강** 적은 스트레스 | 노후의존 | 높은 생활만족도 높은 고용보험 만족도* | 높은 사회보장 제도평가* | 높은 정치관심/참여기회 만족도 한나라당 민주당 |
| 실업자 생활 수준 보장 | 고령남성* 저학력 | 정규/특고/일용 | 보통건강 적은 스트레스 | 낮은 의욕 노후의존 | - | - | 한나라당 민주당 |
| 보육 서비스 | 고령남성 저학력 저소득 | 간접고용/특고/일용 | - | 노후의존 | 높은 일만족도 높은학력 중시** | 높은 사회보장 제도평가** | 높은 정치관심/참여기회/민주주의 제도만족도한 나라당 민주당 |
| 대학 교육 기회 제공 | 고령여성 저학력 경제악화 | 간접고용/특고/일용 | - | 낮은의욕 노후의존* | 낮은 일/생활 만족도 | - | 낮은 민주주의제도만족도* 한나라당 민주당 |
| 주택 제공 | 고령남성 저학력 경제악화 | 간접고용/일용 | 보통건강 적은 스트레스 | 노후의존** | 높은 고용보험 만족도* | - | 한나라당 민주당 |

주: *p<.05; **p<.01; ***p<.001

[표 7] 고용형태별 복지 영역별 지출 증가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 | 전체 | 정규직 | 임시 계약 | 간접 고용 | 특수 고용 | 일용직 |
|------------------|----|-----------|----------|-----------|-----------|-----------|-----------|
| 고용 및 일자리 정책 | 증가 | 88.4 (61) | 85.7 (6) | 82.9 (29) | 90.9 (10) | 100.0 (8) | 100.0 (8) |
| | 유지 | 10.1 (7) | 0.0 (0) | 17.1 (6) | 9.1 (1) | 0.0 (0) | 0.0 (0) |
| | 감소 | 1.4 (1) | 14.3 (1) | 0.0 (0) | 0.0 (0) | 0.0 (0) | 0.0 (0) |
| 의료보장** | 증가 | 58.6 (41) | 42.9 (3) | 72.2 (26) | 72.7 (8) | 25.0 (2) | 25.0 (2) |
| | 유지 | 31.4 (22) | 57.1 (4) | 25.0 (9) | 18.2 (2) | 25.0 (2) | 62.5 (5) |
| | 감소 | 10.0 (7) | 0.0 (0) | 2.8 (1) | 9.1 (1) | 50.0 (4) | 12.5 (1) |
| 고령자에 대한 지원 | 증가 | 84.3 (59) | 57.1 (4) | 91.7 (33) | 90.9 (10) | 87.5 (7) | 62.5 (5) |
| | 유지 | 14.3 (10) | 28.6 (2) | 8.3 (3) | 9.1 (1) | 12.5 (1) | 37.5 (3) |
| | 감소 | 1.4 (1) | 14.3 (1) | 0.0 (0) | 0.0 (0) | 0.0 (0) | 0.0 (0) |
| 가난한 사람에 대한 공공부조 | 증가 | 73.9 (51) | 57.1 (4) | 74.3 (26) | 72.7 (8) | 87.5 (7) | 75.0 (6) |
| | 유지 | 24.6 (17) | 28.6 (2) | 25.7 (9) | 27.3 (3) | 12.5 (1) | 25.0 (2) |
| | 감소 | 1.4 (1) | 14.3 (1) | 0.0 (0) | 0.0 (0) | 0.0 (0) | 0.0 (0) |
|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 증가 | 71.4 (50) | 42.9 (3) | 80.6 (29) | 81.8 (9) | 50.0 (4) | 62.5 (5) |
| | 유지 | 27.1 (19) | 42.9 (3) | 19.4 (7) | 18.2 (2) | 50.0 (4) | 37.5 (3) |
| | 감소 | 1.4 (1) | 14.3 (1) | 0.0 (0) | 0.0 (0) | 0.0 (0) | 0.0 (0) |
| 초중고 교육 | 증가 | 63.8 (44) | 71.4 (5) | 60.0 (21) | 81.8 (9) | 50.0 (4) | 62.5 (5) |
| | 유지 | 30.4 (21) | 14.3 (1) | 40.0 (14) | 9.1 (1) | 37.5 (3) | 25.0 (2) |
| | 감소 | 5.8 (4) | 14.3 (1) | 0.0 (0) | 9.1 (1) | 12.5 (1) | 12.5 (1) |
| 주거비 지원* | 증가 | 53.6 (37) | 71.4 (5) | 60.0 (21) | 45.5 (5) | 12.5 (1) | 62.5 (5) |
| | 유지 | 43.5 (30) | 28.6 (2) | 40.0 (14) | 36.4 (4) | 87.5 (7) | 37.5 (3) |
| | 감소 | 2.9 (2) | 0.0 (0) | 0.0 (0) | 18.2 (2) | 0.0 (0) | 0.0 (0) |

주: *p<.05; **p<.01; ***p<.001

정부의 책임 범위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비정규직이 복지 영역별 정부 지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위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정부 책임의 중요도 평가에서는 일자리 관련 정부의 책임도가 의료보장이나 보육, 그리고 주택 제공에 비해 낮았던 반면, 고용 및 일자리 정책에의 정부 지출이 더 증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중은 88.4%로, 모든 복지 영역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정규직이나 임시계약직보다도 더

나쁜 비정규직 일자리인 간접고용, 특수고용, 그리고 일용직의 비중이 더 높았는데, 다른 복지영역에 대한 응답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의료보장의 경우 정규직의 42.9%만이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간접고용직은 72.7%가, 그리고 임시계약직은 72.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추세의 예외에 속하는 복지영역은 초중고 교육과 주거비 지원으로, 특히 주거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정규직의 71.4%가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간접고용직의 45.5%, 임시계약직의 60%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6]과 [표 7]을 함께 살펴볼 경우 정규직과 여타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영역별 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자질 구성요인

고용형태별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자질의 중요도를 문의한 결과가 아래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의 중요도는 7.1점으로 사회조직과 단체 활동에의 참여 5.7, 그리고 정치참여 5.6보다 높은 편이었지만, 10점이 최고점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빈민 지원의 중요도에 대해 그다지 많이 인식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임시계약직의 중요도 평가가 가장 낮았는데, 정규직의 7.0보다도 낮은 6.8을 기록하였다. 사회조직 및 단체참여나 정치참여의 중요도는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특수고용직의 점수가 각각 6.1과 7.0으로 항목별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8] 고용형태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 평가 비교

| | 전체 | 정규직 | 임시 계약 | 간접 고용 | 특수 고용 | 일용직 |
|-----------|------|------|-------|-------|-------|------|
| 빈민지원 | 7.11 | 7.00 | 6.81 | 7.54 | 7.50 | 7.62 |
| 사회조직/단체참여 | 5.67 | 5.14 | 5.64 | 5.91 | 6.13 | 5.50 |
| 정치참여 | 5.64 | 5.71 | 5.61 | 4.82 | 7.00 | 5.50 |
| 사례수 | 71 | 7 | 37 | 11 | 8 | 8 |

주: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10점 최고로 중요한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자질 평가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이 세 가지 좋은 시민의 자질에 대해 평균점수대 값보다 낮은 평가를 한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위의 [표 6]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표 9]에 정리하였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시민의 책무로서 중시하는 태도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해 평균 점수대값 미만의 응답을 한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미 살펴본 [표 4]의 낮은 복지수준의 사회를 선택한 집단과 비교하는 작업은 큰 의미를 가진다.

[표 9]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 평균 미만집단 특성

| | 인구사회학적 특성 | 고용형태 | 건강과 스트레스 | 근로의욕 노후보장 | 만족도와 복리순위 | 한국사회 평가 | 정치만족도 정당선호도 |
|---------------|---|-------------------|------------|--------------|---|------------------------------|----------------------|
| 빈민지원 | 저연령 고학력 미혼 고소득/ 고부채 큰 직장규모 | 간접고용 | - | - | 낮은 일/ 국민연금** 만족도 낮은 직업훈련/ 학력* 중요도 | 삶의 기회평등에 대한 낮은 평가* | 선호정당 없음 |
| 사회조직/ 단체참여 | 여성 저학력 |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 | - | 낮은의욕 노후의존 | 낮은 국민연금 만족도 낮은 단체활동 중요도* | 삶의 기회평등에 대한 낮은 평가* | 낮은 민주주의 제도만족도* |
| 정치참여 | 저학력 낮은 월평균 가구소득* | 간접고용/ 일용 | 낮은 스트레스 | 낮은의욕 | 높은 정규직 중요도* 낮은 단체활동* 정치활동* 중요도 | 삶의 기회평등에 대한 낮은 평가** | 낮은 민주주의 제도만족도 |

주: *p<.05; **p<.01; ***p<.001

낮은 복지수준의 사회를 선택한 집단이 고연령, 저학력, 그리고 기혼자, 저소득층, 적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던 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좋은 시민의 자질로 낮게 평가한 집단은 이와 정 반대로 저연령, 고학력, 미혼, 그리고 고소득의 상대적으로 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다. 또 이들이 낮은 일과 사회보험 만족도를 가지고, 학력이나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점도 정 반대되는 특성이다. 정당 선호

도도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 선택 집단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했던 것과 달리 선호정당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통상적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러한 상반된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할 터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공동체적 지원의식과 선호하는 복지수준과의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괴리감은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저해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두 가지 사회 및 정치참여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평균 점수대값 미만의 응답을 한 집단은 저학력에 낮은 소득, 그리고 적은 사업장에서 낮은 일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국사회의 삶의 기회평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또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다는 사실은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제도적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6.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시민권은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여러 사회집단간의 다툼과 논쟁 하에 구성되어질 수밖에 없다(Somers, 1994). 특히 표준고용관계의 전제 하에 구성된 사회권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노동인구가 상당한 수로 증가한다면 이러한 시민의 사회권에 대한 욕구가 그 사회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기업에서의 차별로 사적 복지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권의식의 수준과 내용, 그리고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된 구체적인 기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비정규직의 사회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러한 정책의 주요 대상인 비정규직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연구는 많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조사대상자인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세금부담도 낮고 복지수준도 낮은 사회보다 세금수준과 복지수준이 모두 높은 사회를 선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복지의식의 물계급성을 부분적으로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복지국가에 대한 하층

계급의 지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통상적인 복지제도를 넘어 일자리의 질 제고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권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또한 각 영역별로 그에 상응하는 시민의 책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다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으나, 다양한 복지영역에서 정부의 지출은 더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 및 일자리와 관련된 지출요구가 가장 높았는데, 주로 주거비 지원에 대한 지출증가를 중시한 정규직과의 차이도 두드러진다.

그러나 동시에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복지수준의 사회를 선호한 소수 역시 존재하였는데, 이 집단의 경우 고연령, 저학력, 기혼자, 저소득층의 특성을 가지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좀 더 형편이 어려운 일용직이나 간접고용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 결과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좋은 시민의 자질로 낮게 평가한 집단의 특성인 저연령, 고학력, 미혼, 그리고 고소득의 상대적으로 나은 형편에 있는 비정규직과 크게 대조되었다. 즉, 높은 복지국가를 기대하는 비정규직 집단의 경우 빈민에 대한 연대감이 뒤떨어지는 한편, 이러한 연대감을 보유한 비정규직 집단의 사회권 의식은 낮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 복지국가에 대한 주요 지지 세력이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고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사대상자 모두 사회조직 및 단체활동에의 참여, 그리고 정치적 관심도와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도 정치적 관심과 참여 정도, 그리고 주요 제도권 정당에 대한 높은 선호가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와 반비례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의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자체적 수단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공동체적 지원의식과 높은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가 괴리되는 현상, 높은 수준의 복지사회를 원하는 비정규직의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는 한국사회의 사회권 발전의 미래를 밝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권의 보장 및 확장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반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사회의 비정규직은 고용 및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의 정부 책임과 지출 증가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

었고, 호혜성 원칙에 따른 높은 근로의식과 책무 의식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진로(high road) 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내부에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고용형태 및 처지의 차이로 인해 복지사회에 대한 지지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 영역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른 점 역시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정작 더 많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더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하는 집단의 정치적 무관심과 복지사회에 대한 회의는 일자리의 질 제고와 관련된 사회권의 광범위한 확장에 지속적인 장애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러나 소수 심층면접대상자에 대한 조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표성을 가진 대규모 조사에 의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향후 보다 진전된 비정규직의 사회권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 참고문헌 □

- 강효진 (2006).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정책의 평가: 1999년-2003년 한국 노동패널(KLIPS)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4, 387-412.
- 김수완 (2011). 복지국가의 정치적 균열에 관한 연구: 공적 노후소득 보장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2, 251-278.
- 김진규 (2002). 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적용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12, 79-108.
- 김연명 (2001).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쟁점과 대책. *한국사회복지학*. 45, 72-100.
- _____ (2010). 비정규직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의 재검토. *사회복지정책*. 37:4, 155-179.
- 김영순,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211-240.
- 김종건, 김연명 (2003). 비정규노동자 '가구'의 사회복지와 노동력재생산 실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7, 155-178.
- 남우근 (2008). 비정규직 복지 개선의 전제조건은 비정규직 문제해결. *복지동향*. 112, 28-30.
-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 배화숙 (2005).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복지 차이연구: 한국노동패널(KLIPS) 6차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1:4, 217-237.
- 성은미 (2007). 정규직과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수급률과 급여수준 비교연구: 국민연금,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4, 95-120.
- 심창학 (2005). 유럽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영국, 독일, 프랑스의 연금 및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4, 283-311.
- _____ (2009). 연금 및 실업보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호: 덴마크와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169-201.
- 이성균 (2002). 한국사회 복지태도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6:2, 205-228.
- 이신용 (2010). 민주주의,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친화성: 사회보장법에 의회유보원칙의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의 관계- 한국과 독일 비교. *한국사회정책*. 17:3, 153-189.
- 이주희 (2011).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패러다임: 표준고용관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탐색적 시론. *동향과 전망*. 82, 244-277.
- 이철수 (2005). 유연안정성과 노동법의 개선. *비교법학연구*. 6, 137-172.
- 이호근 (2006). 비정규 근로 대책방안: 한국적 「유연안정성」 모델의 정착을 위한 조건. *한국사회정책*. 13, 129-198.
- 전병유, 강병구, 강신욱, 김연명, 김영순, 김혜원, 신정완, 양재진, 윤윤규, 정건화, 정무권, 조성재, 조영철, 채장균 (2007).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총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이남주, 이일영, 강신욱, 김연명, 양재진, 옥우석, 조영철, 장수명, 장종익, 이권범, 정준호, 정진화. (2009).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정무권 (2007a). 한국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 한국사회정책. 14, 257-307.

_____ (2007b). 세계화, 민주화, 한국의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재편. 한국사회정책. 14:2, 6-79.

조돈문 (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 산업노동연구. 7:1, 157-191.

최균, 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성: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223-254.

한동우 (2001).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복지. 복지동향. 33, 20-23.

홍경준 (2009). 선호와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 발달이론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61:4, 35-59.

Bendix, Reinhard. (1984). *Force, Fate and Freedom; on historical soci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lomberg, Helena & Christian Kroll. (1999). Who wants to preserve the 'Scandinavian' service state? Attitudes to welfare services among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 elites in Finland, 1992-6, in *The End of the Welfare State?: Responses to state retrenchment*, eds., Svallfors, Stefan & Peter Talyer-Gooby. London: Routledge.

Esping-Andersen, Gosta & Walter Korpi. (1984). Social policy as class politics in post-war capitalism: Scandinavia, Austria, and Germany, in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ed. by Goldthorpe, John 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79-298.

Fraser, Nancy and Linda Gordon. (1994). Civil citizenship against social citizenship? in Bart van Streenbergen ed.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London: Sage Publications.

Fudge, Judy. (2007). The new discourse of labor rights: from social to fundamental rights? *FudgeArticle*. 29-1, 29-66.

Gentile, Antonina & Sidney Tarrow. (2009). Charles Tilly, globalization and labour's citizen rights.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1:3, 465-493.

Giddens, Anthony. (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Polity Press.

Goul Andersen, Jorgen. (1999). Changing labor markets, new social divisions and welfare state support: Denmark in the 1990s, in *The End of the Welfare State?: Responses to state retrenchment*. eds., Svallfors, Stefan & Peter Talyer-Gooby. London: Routledge.

Hausermann, Silja & Hanna Schwander. (2010). Explaining welfare preferences in dualized societies. Paper prepared for the Panel, "The dualization of European societies?". 17th Conference of Europeanists, April 14-17th 2010, Montreal, Canada.

- Holliday, Ian. (2000).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in East Asia, *Political Studies*, 48, 706-723.
- Korpi, Walter. (1978). *The Working Class in Welfare Capitalism*, London: Routledge.
- _____ (1989). Power, politics, and state autonomy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itizenship: social rights during sickness in eighteen OECD countries since 193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309-328.
- Mundlak, Guy. (2007). The right to work: linking human rights and employment policy.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6:3~4, 189-215.
- Rothstein, Bo. (1998). Just Institutions Matter: *The moral and political logic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lev, Michael. (1983). The social democratic model and beyond: two generations of comparative social research on welfare state. *Comparative Social Research*, 6, 315-52.
- Somers, Margaret R. (1994). Rights, relationality, and membership: rethinking the making and meaning of citizenship. *Law and Social Inquiry*, 19:1, 63-112.
- Svallfors, Stefan. (1999). The middle class and welfare state retrenchment: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in *The End of the Welfare State?: Responses to state retrenchment*, eds. , Svallfors, Stefan & Peter Taylor-Gooby. London: Routledge.
- _____ (2004). Class, attitude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8:2, 119-138.

[부표] 심층면접대상자 사례별 정보

| 케이스 번호 | 성별 | 연령 | 학력 | 구체적 업무 | 고용형태 (근로시간) | 혼인 상태 | 배우자 취업여부 | 18세 이하 자녀수 | 본인 소득 | 가구 소득 |
|--------|----|----|-------|-----------------|-------------|-------|----------|------------|-------|-------|
| 1 | 여 | 50 | 고졸 이하 | 식당주방일 | 일용직 | 결혼 | 비정규직 | 0 | 140 | 300 |
| 2 | 남 | 50 | 고졸 이하 | 식당주차 | 일용직 | 결혼 | 비정규직 | 0 | 130 | 350 |
| 3 | 여 | 23 | 고졸 이하 | 백화점 의류매장 점원 | 간접고용 | 결혼 | 자영업자 | 0 | 153 | 300 |
| 4 | 여 | 45 | 고졸 이하 | 식당홀서빙 | 일용직 | 결혼 | 정규직 | 2 | 160 | 400 |
| 5 | 남 | 48 | 고졸 이하 | 회사택시운전사 | 정규직 | 결혼 | 비정규직 | 2 | 150 | 250 |
| 6 | 남 | 62 | 대졸 이하 | 보험설계사 | 간접고용 (기타) | 결혼 | 정규직 | 1 | 300 | 700 |
| 7 | 여 | 49 | 대졸 이하 | 보험설계사 | 특수고용 (기타) | 결혼 | 자영업자 | 1 | 300 | 700 |
| 8 | 남 | 51 | 고졸 이하 | 대리운전 | 특수고용 (기타) | 결혼 | 자영업자 | 0 | 150 | 600 |
| 9 | 남 | 48 | 대졸 이하 | 공원관리 (청소, 조경 등) | 임시계약 | 결혼 | 정규직 | 2 | 150 | 350 |
| 10 | 여 | 51 | 고졸 이하 | 방독면공장 포장 및 분류 | 정규직 | 결혼 | 비정규직 | 0 | 160 | 350 |
| 11 | 여 | 43 | 고졸 이하 | 콜센터 상담사 | 임시계약 | 결혼 | 정규직 | 1 | 130 | 360 |
| 12 | 여 | 37 | 대졸 이하 | 보험설계사 | 임시계약 | 미혼 | 특수고용 | 0 | 150 | 500 |
| 13 | 여 | 26 | 대졸 이하 | 과외교사 | 기타 (시간제) | 미혼 | 자영업자 | 0 | 30 | 300 |
| 14 | 여 | 64 | 중졸 이하 | 청소미화원 | 간접고용 | 결혼 | 은퇴 | 0 | 100 | 100 |
| 15 | 남 | 26 | 대졸 이하 | 컴퓨터 프로그래머 | 임시계약 | 미혼 | | 0 | 160 | 400 |
| 16 | 남 | 36 | 대졸 이하 | 잉크인쇄 | 정규직 | 미혼 | | 0 | 250 | 450 |
| 17 | 여 | 30 | 대졸 이하 | 전화상담사 | 간접고용 | 미혼 | | 0 | 155 | 240 |
| 18 | 남 | 60 | 고졸 이하 | 물류유통 | 자영업 | 결혼 | 가정주부 | 0 | 250 | 300 |
| 19 | 남 | 33 | 대졸 이하 | 보험설계사 | 특수고용 (기타) | 미혼 | | 0 | 200 | 800 |
| 20 | 여 | 43 | 기타 | 공인중개사 | 자영업 | 이혼 | | 2 | 100 | 100 |

| 케이스 번호 | 성 별 | 연령 | 학력 | 구체적 업무 | 고용형태 (근로시간) | 혼인 상태 | 배우자 취업여부 | 18세 이하 자녀수 | 본인 소득 | 가구 소득 |
|-----------|--------|----|----------------|----------------------|----------------|----------|-------------|------------------|----------|----------|
| 21 | 남 | 67 | 대졸 이하 | 공원관리인 | 임시계약 | 사별 | | 0 | 100 | 100 |
| 22 | 여 | 40 | 대학원 졸 이상 | 프로젝트별 고용 | 임시계약 (기타) | 미혼 | | 0 | 300 | 300 |
| 23 | 여 | 30 | 대졸 이하 | 가정과목 중등교사 | 임시계약 (시간제) | 미혼 | | 0 | 190 | 900 |
| 24 | 여 | 54 | 중졸 이하 | 산모도우미 | 일용직 | 결혼 | 실업 | 0 | 100 | 300 |
| 25 | 여 | 32 | 대학원 졸 이상 | 국립암센터 연구원 | 임시계약 | 미혼 | | 0 | 150 | 250 |
| 26 | 여 | 31 | 대졸 이하 | 경리 | 임시계약 | 미혼 | | 0 | 100 | 250 |
| 27 | 여 | 29 | 대졸 이하 | 어린이집 교사 | 임시계약 | 미혼 | | 0 | 170 | 330 |
| 28 | 여 | 25 | 대졸 이하 | 교육과학 기술부직원 | 임시계약 | 미혼 | | 0 | 120 | 120 |
| 29 | 여 | 30 | 대학원 졸 이상 | 탈북자지원 재단사무직 | 임시계약 | 미혼 | | 0 | 106 | 400 |
| 30 | 남 | 29 | 대졸 이하 | 금강제화 사무직 (인사부) | 임시계약 | 미혼 | | 0 | 270 | 1000 |
| 31 | 남 | 24 | 대졸 이하 | 시청직원 | 임시계약 | 미혼 | | 0 | 130 | 400 |
| 32 | 여 | 48 | 고졸 이하 | 양복재단실 | 간접고용 | 결혼 | 비정규직 | 0 | 95 | 200 |
| 33 | 여 | 38 | 대졸 이하 | 유치원교사 | 임시계약 | 결혼 | 비정규직 | 2 | 130 | 430 |
| 34 | 남 | 45 | 고졸 이하 | 가구제조업 | 간접고용 | 결혼 | 비정규직 | 2 | 300 | 300 |
| 35 | 여 | 50 | 중졸 이하 | 전자회사 (핸드폰 충전기) | 간접고용 | 결혼 | 자영업자 | 0 | 120 | 800 |
| 36 | 여 | 50 | 고졸 이하 | 전자회사 (핸드폰 충전기) | 간접고용 | 결혼 | 정규직 | 0 | 115 | 465 |
| 37 | 여 | 50 | 고졸 이하 | 전자회사 (핸드폰 충전기) | 간접고용 | 이혼 | | 0 | 120 | 120 |
| 38 | 여 | 53 | 중졸 이하 | 봉제 공장 | 일용직 | 결혼 | 정규직 | 0 | 120 | 320 |
| 39 | 여 | 50 | 중졸 이하 | 봉제 공장 | 정규직 | 결혼 | 자영업자 | 0 | 100 | 350 |
| 40 | 여 | 34 | 대졸 이하 | 회계사 사무실 | 임시계약 | 미혼 | | 0 | 200 | 340 |

| 케이스 번호 | 성 별 | 연령 | 학력 | 구체적 업무 | 고용형태 (근로시간) | 혼인 상태 | 배우자 취업여부 | 18세 이하 자녀수 | 본인 소득 | 가구 소득 |
|-----------|--------|----|----------------|-----------------|----------------|----------|-------------|------------------|----------|----------|
| 41 | 여 | 24 | 대졸 이하 | 국제회의 통역사 | 일용직 | 미혼 | | 0 | 200 | 200 |
| 42 | 여 | 22 | 대졸 이하 | 웨딩사진사 | 임시계약 (시간제) | 미혼 | | 0 | 400 | 2000 |
| 43 | 여 | 22 | 대졸 이하 | 성우 | 임시계약 | 미혼 | | 0 | 180 | |
| 44 | 여 | 28 | 대졸 이하 | 패션잡지 에디터 | 임시계약 | 미혼 | | 0 | 35 | 600 |
| 45 | 여 | 24 | 대졸 이하 | 의류회사 디자이너 | 임시계약 | 미혼 | | 0 | 125 | 600 |
| 46 | 여 | 29 | 대졸 이하 | 홍차회사 영업사원 | 임시계약 | 미혼 | | 0 | 150 | 150 |
| 47 | 여 | 38 | 고졸 이하 | 의류매장 판매사원 | 임시계약 | 결혼 | 정규직 | 0 | 120 | 300 |
| 48 | 여 | 48 | 고졸 이하 | 백화점 의류매장 매니저 | 임시계약 | 결혼 | 비정규직 | 0 | 200 | 500 |
| 49 | 남 | 49 | 대졸 이하 | 건설회사 현장소장 | 임시계약 | 결혼 | 자영업자 | 0 | 300 | 500 |
| 50 | 여 | 46 | 대졸 이하 | 백화점 의류판매 사원 | 임시계약 | 결혼 | 비정규직 | 2 | 150 | 370 |
| 51 | 여 | 43 | 대졸 이하 |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 임시계약 (시간제) | 결혼 | 실업 | 1 | 100 | 100 |
| 52 | 남 | 40 | 대졸 이하 | 자동차부품판매 | 임시계약 (시간제) | 미혼 | | 0 | 100 | 200 |
| 53 | 여 | 23 | 대졸 이하 | 대학 교직원 | 임시계약 | 미혼 | | 0 | 130 | 600 |
| 54 | 남 | 38 | 대졸 이하 | 자동차부품판매 | 임시계약 (시간제) | 미혼 | | 0 | 100 | 200 |
| 55 | 남 | 34 | 대학원 졸 이상 |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인턴 | 임시계약 | 미혼 | | 0 | 130 | 250 |
| 56 | 남 | 50 | 고졸 이하 | 주물공장 | 기타 (기타) | 결혼 | 가정주부 | 1 | 150 | 150 |
| 57 | 여 | 32 | 대학원 졸 이상 | 학교복지사 | 정규직 | 미혼 | | 0 | 100 | |
| 58 | 여 | 34 | 고졸 이하 | 공인회계사 사무소 직원 | 정규직 | 결혼 | 정규직 | 2 | 177 | 400 |
| 59 | 여 | 42 | 대졸 이하 | 학습지도사 | 특수고용 (시간제) | 결혼 | 정규직 | 1 | 150 | 450 |
| 60 | 여 | 51 | 대졸 이하 | 정수기코디 | 특수고용 (기타) | 결혼 | 정규직 | 0 | 230 | 1000 |

| 케이스 번호 | 성 별 | 연령 | 학력 | 구체적 업무 | 고용형태 (근로시간) | 혼인 상태 | 배우자 취업여부 | 18세 이하 자녀수 | 본인 소득 | 가구 소득 |
|-----------|--------|----|----------------|---------------|----------------|----------|-------------|------------------|----------|----------|
| 61 | 여 | 29 | 대졸 이하 | 병원행정 | 임시계약 | 미혼 | | 0 | 250 | 500 |
| 62 | 여 | 29 | 대학원 졸 이상 | 성균관대 연구처근무 | 임시계약 | 결혼 | 정규직 | 1 | 150 | 550 |
| 63 | 여 | 29 | 대학원 졸 이상 | 건설팅회사 홍보부 | 임시계약 | 미혼 | | 0 | 180 | 500 |
| 64 | 여 | 27 | 대졸 이하 | 유치원교사 | 임시계약 | 미혼 | | 0 | 220 | 1500 |
| 65 | 여 | 27 | 대졸 이하 | 도서관사서 | 임시계약 | 미혼 | | 0 | 180 | 500 |
| 66 | 여 | 28 | 대졸 이하 | 건축설계도면 | 일용직 | 미혼 | | 0 | 80 | 400 |
| 67 | 여 | 31 | 대학원 졸 이상 | 사회복지사 | 임시계약 | 미혼 | | 0 | 170 | 170 |
| 68 | 여 | 31 | 대졸 이하 | 독서지도사 | 간접고용 (시간제) | 미혼 | | 0 | 150 | 400 |
| 69 | 여 | 43 | 고졸 이하 | 보험설계사 | 특수고용 | 미혼 | | 0 | 300 | 300 |
| 70 | 여 | 49 | 중졸 이하 | 봉제 | 일용직 | 결혼 | 실업 | 1 | 160 | 160 |
| 71 | 여 | 63 | 중졸 이하 | 건물 청소미화원 | 간접고용 | 결혼 | 무직 | 0 | 100 | 500 |
| 72 | 여 | 43 | 대졸 이하 | 학습지도사 | 특수고용 (기타) | 미혼 | | 0 | 200 | |
| 73 | 남 | 42 | 고졸 이하 | 학교시설관리 | 정규직 | 결혼 | 가정주부 | 4 | 300 | 300 |
| 74 | 남 | 57 | 고졸 이하 | 초등학교경비 | 임시계약 (기타) | 결혼 | 비정규직 | 0 | 180 | 500 |
| 75 | 남 | 57 | 대졸 이하 | 전직 은행 근무 | 실업 및 은퇴 | 결혼 | 가정주부 | 0 | 500 | 650 |
| 76 | 남 | 64 | 고졸 이하 | 아파트경비 | 간접고용 (기타) | 결혼 | 가정주부 | 2 | 104 | 104 |
| 77 | 남 | | 대졸 이하 | 자동차판매 | 특수고용 | 미혼 | | 0 | 250 | 500 |
| 78 | 남 | 32 | 고졸 이하 | | 실업 및 은퇴 | 미혼 | | 0 | 0 | 100 |
| 79 | 여 | 40 | 대학원 졸 이상 | 서울시공무원 | 임시계약 | 결혼 | 무직 | 1 | 330 | 330 |
| 80 | 남 | 33 | 대학원 졸 이상 | 이미지 센서 회사 | 정규직 | 결혼 | 학생 | 1 | 400 | 400 |

Nonstandard Workers' Perspectives on Social Rights

Lee, Joohee*

The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in Korea has consistently increase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The increasing size of nonstandard workforce raised concern because these jobs provide few benefits and social insurance, and lacked guarantees of long-term employment. Conducting intensive in-depth interviews with 80 nonstandard worke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ir needs for social rights. Most interviewees demonstrated their preference for a strong welfare state, even if it requires high levels of taxation. They were also well aware of welfare responsibilities as well as welfare rights. However, a minority of respondents preferred tax cuts and a smaller welfare state, despite the fact that they belong to the lower socio-economic group among nonstandard workforce. In addition, interviewees who maintained a high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lso preferred the same smaller welfare st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onstandard workers' needs for strong welfare state might not be easily realized due to these divisions among themselves.

Key words: social rights, welfar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ocial politics, high road

◆ 2012.01.19. 접수 / 2012.02.24. 1차 수정 / 2012.03.02. 게재 확정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Ewha Womans University (j.lee@ewha.ac.kr)